



소상공인·취약계층 지원

소상공인 '온전한 손실보상'

+24.6조원

손실보전금 지급

+23.0조원

업체별 매출액·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
손실보전금 600~1,000만원 지급

▪ (대상) 소상공인·소기업+중기업 (매출액 10~50억원) 371만개

③ 1·2차 방역지원금(100+300만원) 포함 최대 1,400만원 지급

→ 추경 통과 바로 다음날인 **5.30일부터** 지급 개시

손실보상 제도개선

+1.6조원

①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→100% 인상

②하한액 분기별 하한액 50→100만원으로 인상

③재원확충 2/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

특고·프리랜서 등 지원

+2.1조원

- 특고·프리랜서 대상 **200만원**(80만명, 1.5조원)
- 법인택시·노선 버스(비공영제) 기사 대상 **300만원**(16.1만명, 0.5조원)
- 저소득 예술인 **활동지원금 200만원**(3만명, 605억원)



민생·물가 안정

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+1.7조원

긴급생활안정지원

+1.0조원

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**100만원**까지 한시 지급

금융지원

+0.17조원

취약계층 대상 **20조원**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

	한도	금리	공급규모
안심전환대출*	2.5억원	최대 30bp인하	20조원
청년대학생 소액금융	1,200만원(인당)	3.6~4.5% (보증료 포함)	0.1조원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1,000만원(인당)	15.9% (보증료 포함)	0.2조원

* 고금리·변동 → 저금리·고정

생활물가 안정 지원

+0.5조원

서민·농어가

+0.3조원

- 비료가격 상승분의 80%를 국가·지자체·농협이 부담
-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
-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

가공식품·외식업계

+0.1조원

-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90%를 국가(70%)·기업이 부담
- 원료매입 자금지원(업체당 최대 50억원) 확대
-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(업체당 최대 6억원) 등

산불 복구·대응 지원

+0.1조원

피해복구

+0.03조원

- 동해안 **산불 피해농가 지원**(대체작물 지원 400가구)
-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**희망근로 확대**(600명, 5개월) 등

산불대응

+0.04조원

-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(1대, 산림청)
- 산불 전문 진화차량 확충(8대)
- 강원·경북 비상소화장치 설치